



의안번호	제 호
------	-----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 출 연 월 일	2020. 3. 13.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0. 3.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 가. (목적)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나. (시장의 책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지원방안 마련, 농업인의 참여 보장, 공동체 활성화 활동지원
다. (농업인의 참여) 교육과 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생태계 보존 역할
라. (위원회 설치)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농민수당 사항 심의·의결
마. (지급대상) 논산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해당 농업인
바. (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20만원, 관내 사용이 가능한 수단(지역화폐)으로 지급
사. (지원제외)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한 농민 등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19. 7. 24.

나.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비고
배기성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대둔로 351번길 15-6 (산직리)	

다. 청구취지 공표 : 2019. 7. 25.

- 서명요청기간 : 2019. 7. 26. ~ 2019. 10. 25.(3개월)

라. 청구인명부 제출(접수) : 2019. 10. 25.

마.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 : 2019. 11. 1.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11. 1. ~ 11. 14.(시, 읍·면·동)

바. 연서 주민수 : 2,570명

* 청구요건 : '18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의 1/40 이상 서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대상 주민수 비율 (연서주민수)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선거권결격자 제외)	19세 이상 외국인 (3년 이상 영주체류자격)	
102,779	102,669	110	총수 대비 1/40 이상 (2,570명 이상)

※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중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없는 자 : 178명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사항

가. 청구대상 제외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주민청구 조례안 해당사항 없음

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 청구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건 없음

다. 청구인명부 유·무효 결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방법

- 유효서명 확인은 청구인 명부 제출일('19. 10. 25.) 기준으로 판단
- 유효서명 : 19세 이상, 관내거주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일치, 서명날인 등
 - 무효서명 : 이중서명, 연령미달, 관외거주자, 생년월일 불일치자 및 미기재자, 사망 말소자, 서명 요청기간외의 서명 등

청구인명부 열람결과

(단위 : 명)

시 군	연 주 민 수	유 효 서 명 인 수	무효 심의대상(명)					
			계	주 민 등 록 불 일 치	만19세미만 (연령미달)	관외(타시도) 거 주	사 망 말 소	기 타 (이중서명 등)
계	4,245	3,445	800	533	5	39	1	222
강경읍	107	96	11	8		1		2
연무읍	671	578	93	60		2		31
성동면	429	333	96	59				37
광석면	165	141	24	20				4
노성면	216	183	33	32		1		
상월면	367	305	62	43		2	1	16
부적면	361	288	73	42				31
연산면	363	273	90	71	1	6		12
벌곡면	318	243	75	19		13		43
양촌면	252	214	38	30				8
가야곡면	308	240	68	50	2			16
은진면	83	76	7	3				4
채운면	66	52	14	1				13
취암동	379	298	81	69	2	6		4
부창동	152	125	27	26				1
기타지역	8		8			8		

청구인명부 유·무효 결정 건

○ 청구인명부 현황

법정 연서 충족인원(명)	청구인명부(명)			비고
	계	유효	무효심의대상	
2,570	4,245	3,445	800	

○ 유효서명 : 3,445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 확인 결과 정당한 서명으로 인정함.

○ 무효서명 : 800명

-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 확인결과 정당한 서명으로 볼 수 없음
- * 주민등록 불일치(533), 연령미달(5), 관외거주(39), 사망말소(1), 기타 이중서명 등(222)

○ 유효서명 충족여부 : 청구요건 충족

- 조례의 유효 청구인이 3,445명으로 법정 연서 충족인 2,570명 초과

라. 청구요건 심의결과 : 수리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

5. 참고사항

가. 조례제정 청구 검토의견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관련법규 : 붙임 3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활동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논산시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이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의 추천을 통해 논산시를 대표하는 사람 4명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4명
3. 시장과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2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7조 1항에 의거하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열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참석위원의 2/3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농민수당을 논산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실제 경작 및 거주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다.

제11조(결정 절차) ①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등을 위한 7인 이상의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각 마을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3. 신청 전(前)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
4. 신청 전(前)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민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제14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대표 배기성)이 주민 4,245명의 서명(유효서명 3,445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농업시장개방의 가속화, 농민인구 급감,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지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농민수당이 균등하게 지급되므로 소득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급대상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포함되어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자격박탈 및 수급비 차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충청남도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9월 30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시군 예산부담비율을 논의한 바,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은 도비:시비를 40%:60%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과 논산시 농민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道 식량원예과-1646(2020.1.29.)호):
광역-기초 간 공식적 합의 등을 통해 제도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원화 필수

3. 논산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의하면 농업인 1인당 지급액을 월 20만원, 연 2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연간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농업정책과 본예산 567억 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주민발의(안) 소요예산: 550억(22,903명 × 월20만원 × 12개월)

※ 농업경영체 농업인수: 2018년 기준 22,903명

4. 따라서, 논산시농민수당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지원되면 광역-기초간 중복지원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중앙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와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1. 조례명 :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① 안 제8조(지급대상 및 범위)

-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안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지급
- 시장은 농민수당을 논산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수단으로 지급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민수당은 조례안 제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지급

※ 대상인원(2018년 기준)은 22,903명*으로 연간 240만원(월20만원)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논산시 농업인 수

-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역할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추계결과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749억원 소요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비	2,748.5	549.7	549.7	549.7	549.7	549.7

- 산출내역

- 2020년 소요비용 : 농업인 22,903명 × 240만원 = 549.7억원
- 2020년 ~ 2024년 소요비용 : 549.7억원 × 5년 = 2,748.5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부담

- 농민수당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자체재원으로 도입하기에는 논산시의 재정여건 상 어려운 입장

4. 작성자: 행복도시국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 조

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